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농<mark>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mark> 대 정 부 건 의 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20년 10월 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 정 부 건 의 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0년 10월 일

제 안 자: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피해가 심해질수록 농업이탈은 정해진 수순임
- 이러한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하였음
- 그러나,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30%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가축재해보험은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북 축산 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은 92%에 이르며,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 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 재해보험처럼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 농업재해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람

□ 붙 임:대정부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을 위한 대 정 부 건 의 안

지난 4월 초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개화기를 앞둔 과수는 커다란 냉해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름에는 유례가 없는 50여 일이 넘는 장마로 식물의 성장과 수확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연이은 태풍은 수확기의 농작물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식량수입국들은 향후 식량난을 겪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피해가 심해질수록 농민들의 농업이탈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과 복구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보험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소멸성 보험이며, 시행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까다로운 보상체계와 가입품목의 제한으로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면서 농업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여, 30%대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닭이나 돼지 등 가축 분야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북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은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농작물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재로서의 농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재해보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축 재해보험처럼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 구호대책 수준인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